무기수 김신혜 재심 개시 여부 18일 결정

서면 통지 대신 해남지원장이 직접 발표키로

복역 중 피고인 재심 개시 첫 사례될지 주목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신혜(여·38)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8일 결정된다.

8일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과 김신혜 재심사건 변호인단에 따르면 해남지원 형사1부(재판장 최창훈 지원장)는 오는 18일 오후 1시30분 1호 법정에서 김씨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를 직접 발표한다.

이 사건은 존속살해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해 줄 것을 청구한 사건이다.

그동안 법원이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서면으로만 통지해 온 관례에 비춰볼 때 재판장의 육성 발표는 매우 이례적이다. 그만큼 법원이 이 사건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증명이다.

만약, 법원이 재심을 받아들인다면 복역 중 피고인의 재심이 개시된 첫 사례가 된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구성된 '김신혜 재심 변호인단'은 "재심 개시 결정이 내려질 경우 그 의미는 대한민국 사법사에 있어서 매우 크다"며 "특히, 인권 보호의 역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김씨의 재판 과정에서 고려되지 않은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 행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과정의 불법 감금·체포, 가혹행위, 구속영장 실질심사 미고지, 수사 경찰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김씨는 2000년 3월 7일 자신을 추행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1년 3월 대법원의 상고기각 결정으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김씨는 사건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여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했을 뿐 아버지를 살해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 사건은 TV 시사프로그램 등을 통해 알려졌으며, 법률구조단의 재심 청구 후 다음 아고라의 재심 청원방에서 2만9000여명이 서명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기수 김신혜 사건은

보험금 노리고 성추행한 아버지 살해 판결

김씨 "강압수사 따른 거짓자백" 결백 주장

'보험금을 노린 살인인가', '부실 수사 희생양인가'

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5년8개월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 김씨는 스물셋 아가씨 때 수감돼 지금은 서른여덟 숙녀가 됐다. 김씨는 대법원 판결로 형이 확정된 후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실체적 진실은 아직 알 수 없지만 그녀는 왜 부인하는 걸까.

수사기관과 사법부는 김씨의 살해 동기는 '아버지의 성추행'이고,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다고 밝혔다.

2000년 3월 7일 채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5시50분께. 완도 바닷가의 한적한 시골마을 버스정류장 앞에서 50대 초반의 남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망자는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 장애인으로,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살던 김씨의 아버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사체가 도로에서 발견됐고, 그 주변에 자동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이 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충격에 따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하게 된다. 그리고 사건 발생 만 하루가 조금 지난 3월9일 0시10분께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큰 딸 김신혜씨를 전격 체포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는 성추행이라고 발표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께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당했다"는 말을 들은 김씨가 자신도 중학생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기억을 떠올리며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고 밝혔다. 김씨가 사망한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김씨는 이 두가지 사실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 아버지는 딸들을 성추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파렴치범이 돼 버린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며 오늘까지도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보험금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인했다. 아버지는 3급 장애인으로, 이를 숨기고 보험 가입을 했지만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돼 설사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이내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의혹은 또 있다. 사법부가 판단한 사실관계에서 '물적 증거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수사기관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수면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양주병과 술잔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결국 수사기관은 "김씨가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받아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했다.

그러나 김씨는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며 진술을 뒤집고 있다. 김씨는 대법원 확정판결 직전인 2001년 2월 3일 편지에서 "제가 누명을 쓴 것, 수사기관의 타락, 법원의 편파적인 태도에 대한 설금픔에 앞서 제 아버지가 딸을 추행한 파렴치범으로 몰리는 것을 손도 쓰지 못하고 보고만 있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럽습니다. 아버지의 누명이라도 벗길 수만 있다면…"이라고 썼다.

극명히 다른 주장에 대해 18일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지 주목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천 사랑 환경보호 캠페인 광주전남 레미콘공업협동조합협의회(회장 염진섭) 소속 임직원 150여명은 지난 7일 오전 광암교~유덕교 일대에서 쓰레기 수거 등 '광주천 사랑 환경보호 캠페인'을 펼쳤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남영전구 수은 유출 인근 하천 유입 가능성

공장 배수로 맨홀서 검출

광주시와 광주보건환경연구원, 광산구, 영산강유역환경청 등 4개 기관이 지난 7일부터 '남영전구 수은 유출사고'(본보 11월 5일자 6면)에 대한 합동 정밀조사에 들어갔다. 특히 광주시는 공장 주변 하천으로 수은이 유입됐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남영전구 공장 부지 내 6개 지점에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 검사한 결과 2개 지점의 토양에서 기준을 초과한 수은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6일 남영전구 공장 안팎의 배수로 맨홀과 풍영정천 주변 10개 지점의 토양을 추가로 채취해 검사한 결과 공장 내 배수로 맨홀에서 수은을 확인했다. 광주시는 광산구와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 수은의 전량 수거하고 수질과 토양 시료를 채취토록 조치했다.

또 광주시 등 4개 기관은 유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사업장 내부 배관조사 등을 시작했으며, 공장에서부터 장수천과 풍영정천으로 이어지는 배수로 맨홀의 토양 및 수질 시료를 채취해 추적 조사에 나섰다.

남영전구 형광등 생산라인에 근무했던 근로자와 철거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 중인 이들 기관은 향후 채취한 시료 분석결과 공공 수역에 불법 유출이 확인될 경우 사업장 고발과 함께 퇴적물 수거 등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남영전구 측은 "이번 사고로 수은 중독 치료를 받고 있는 모든 분들께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며 "접수창구는 남영전구 광주공장에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이곳 저곳 옮겨다닌 집단폐사 돼지 사체

원인 규명 없이 무안서 강진 옮겨 방치…질병 전염 우려

원인 불명으로 집단 폐사한 돼지 사체들이 폐사 원인에 대한 규명도 없이 시골 농장 이곳 저곳을 돌면서 질병 전염 등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강진군 등에 따르면 무안군 운남면 A농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유로 폐사한 돼지 20여마리가 일정기간 방치된 이후 지난달 15일께 강진군 신전면 B농장으로 옮겨졌다. A농장과 B농장은 자체 사료 공장을 보유한 농업회사 소속이다.

앞서 무안군 A농장 측은 폐사한 돼지에게서 피어난 악취 등을 이유로 농장 주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자 돼지 사체를 강진군 B농장으로 이동시켰다.

강진 B농장 퇴비사에 지난달 29일까지 방치돼 있던 돼지 사체는 또다시 인근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광주의 한 폐기물업체 화물차량에 실려 어디론가 이동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원인 불명으로 무안군의 한 농장에서 죽은 돼지 사체가 강진까지 옮겨진 뒤 보름 동안 방치돼 있다가 또다시 제 3의 장소로 실려 간 것이다.

문제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폐사 원인을 규명한 후 폐가축 처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보내져야 할 돼지 사체가 원인 규명도 없이 버젓이 농장 간 이동조치가 됐다는 점이다.

강진군 관계자는 "관련법을 어긴 사실이 드러난 만큼, 최초 사건 발생지인 무안군에 정확한 폐사 원인 규명 등 관련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구한 상태"라고 밝혔다.

농장 측은 "돼지는 집단 폐사한 게 아니라 한 마리 한 마리씩 저절로 죽은(자연사한) 것을 모아서 처리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오장원 전 광주여대 총장 교비 횡령 혐의 무죄 판결

교비를 보험료로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오장원(59) 전 광주여대 총장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총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교직원 2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또 광주여대 원격교육원 운영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교육원 운영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 전 총장과 교직원들은 2008~2014년 교비 3억6000여만원을 개인연금보험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교비를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는 증거가 없을 뿐더러 계약 관계상 교비 적립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 오 전 총장과 이선재(52) 광주여대 총장, 교직원 8명을 교육원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로 입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교육원 운영비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하고, 보험금을 횡령했다며 오 전 총장과 교직원 2명, 교육원 운영자 박씨만 기소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인복)는 8일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주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의 관리부실로 인화학교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해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12년 3월 4억4000만원대 소송을 냈다. 이들은 1985년부터 2005년까지 인화학교 교사들로부터 성폭행 등 범죄를 당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므로 국가배상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을 이 때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권 시효인 5년이 지났다고 봤다. /연합뉴스

5·18 폄훼 고양시 의원 오늘 광주방문 사과키로

5·18 민주화운동을 헐뜯고 깎아내리는 메시지를 유포해 물의를 빚은 새누리당 소속 김홍두 경기도 고양시의원이 9일 광주를 찾아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에 사과하고 국립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다.

김 의원은 이에 앞서 지난 5일 '5·18관계자와 광주시민에게 죄송하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재단에 전달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새정치민주연합 등 고양시의원 17명 전원을 카카오 톡 단체방에 초대한 뒤 세월호와 5·18 희생자에 대해 '수학여행 중 사망한 사람 8억5000만~12억5000만원, 5·18 폭동자 6억~8억원', '폭동해야 대박나는 참으로 (X)같은 종북세상'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물을 보냈다. /김형호기자 khh@

두륜산 케이블카 정지사고 원인 보니…쥐 2마리 때문에

쌍나팔

○…탑승객 49명이 허공에 멈춰선 케이블카 안에서 3시간이나 갇혀있던 구조된 지난 5일 해남 두륜산 케이블카 정지 사고는 쥐 2마리 때문에 빚어진 소동으로 판명.

○…8일 해남군 등에 따르면 케이블카에 전력을 공급하는 10개의 배전상자 중 전력 자동전환장치가 설치된 상자 안에 쥐 2마리가 들어와 누전을 일으키는 바람에 예비전력조차 공급받지 못하고 케이블카를 멈추게 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확인.

○…어른 주먹 크기의 쥐들이 전류 저항 때문에 열이 발생하는 배전상자 안으로 주위를 피해 들어가 전력공급장치에 문제를 일으킨 것인데, 케이블카 업체 측은 쥐가 갉아놓은 흔적이 발견된 플라스틱 전선 덮개를 금속 소재로 교체하고 고장 난 전력공급장치도 새것으로 바꾸는 등 '쥐 공격'에 대비한 뒤 조만간 운행을 재개할 예정. /해남=박희석기자 dia@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 공고

1.매각물건의 표시 및 매각조건

<경매 1계>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단독주택,다가구주택]					
2015타경 12954	1	동구 계림동 557-8 76㎡	대	74,549,000	일괄매각,제시외
		동구 무등로321번길 10-20 9평3층 제시외 창고 등 29.5㎡	단독주택	74,549,000	건물포함
[대지/임야/전답]					
2015타경 11852	1	화순군 동면 국동리 322 1881㎡[이분의10분의3지분전부,공유자우선매수권행사제한]	전	4,288,680 / 4,288,680	농지취득자격증명요
[상가/오피스텔,근린시설]					
2015타경 6911	1	북구 신용동 624-11 3층 301호 108㎡	근린시설	127,000,000 / 127,000,000	
2015타경 10903	1	서구 월드컵4강로197번길 14 74.58㎡ 부속 변소 2.31㎡ 제시외 점포 등 29.5㎡	점포	7,114,300 / 7,114,300	건물만매각,제시외건물포함

사건번호	물건번호	소재지 및 면적[㎡]	용도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 [단위:원]	비고
[자동차,중기]					
2015타경 6591	1	사용본거지:안산시 상록구 웃말4길 7, 302호[일동] 등록번호:46수7759 차명:쏘나타[SONATA] 연식:2011	자동차	13,000,000 / 13,000,000	보관장소:광산구 산정동156-2심산주차장

● 공고된 부동산의 면적 표시는 실제와 다소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매각조건

2. 매각기일 : 2015. 11. 24. [화] 10:00

3. 매각결정기일 : 2015. 12. 1. [화] 16:00

4. 매각장소 : 광주지방법원 입찰법정

5. 매각방법

6. 매각허가 및 대금납부

7. 소유권이전 및 인도

8. 주의사항

2015. 11. 9.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원태